

## 민간이 자립과 자금, 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



김종수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상임이사

지역의 분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민간에 나온 지 4개월이 되었다. 연구원의 보호막을 벗고 야생에 나온 것이다. 사람들이 안쓰럽게 보기도 하고 우려하기도 한다. 아직은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기왕에 시작했으니 민간에서 활동하는 장점을 살려보려고 한다.

무엇이 있을까? 우선 말 그대로 '업체'가 되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다. 사실 연구원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장점도 있지만 상상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간의 필요를 조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에 제안을 하여도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당사자성을 가지고 민간의 자원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늘 생각하였다.

보통 민간 영역은 '협의를 하되 자율성을 침해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전망이 가능한 '인내 자본'을 투여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관의 돈, 특히 보조금 방식은 담당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상상력이 적용된 사업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물론 국민의 세금을 근거 없이 쓸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사업집행보다는 일일이 정산을 하다 볼일 다 보기도 한다. 이견 정말 서로 에너지 낭비이다. 공무원 개인이 전폭적인 지원 의지가 있어도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않아 그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많다(보람된 일을 하고도 징계를 받기엔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보통 성과도 바로 나오기를 바란다. 영역마다 5개년 계획을 그리기도 하지만 아



직까지 정책이 5년, 10년 후의 비전을 보고 뚜벅뚜벅 전진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하였다. 그림을 그렇게 그려도 조급해하기 마련이다. 대부분 자기 임기 내에 성과가 나오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기 위해 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하나씩 실행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협동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하였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업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사실 민간에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영역도 민간기업, 학교 등 파트너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참여의 플랫폼만 잘 설계하면 충분히 자원들이 모일 수 있다.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잘 엮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함께 만들고 그것을 공감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모으려고 한다. 이제껏 마음이 있어도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 일을 책임질 단위가 없어서 무산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다. 이제 그 일을 하나씩 만들어가려고 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 세움의 첫 번째 사업인 공주대 청년학교가 그런 모델이다. 지역과 학생들의 상생을 고민하고 지역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찾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마음을 모아주셨다. 아직까지 순수하게 민간의 자원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이 먼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그럴 때 정책적 지원이 되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민과 관이 대등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협의가 가능하다. 단순 자문이 아니라 함께 기획, 실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큰 그림을 그릴 때부터 실행단계까지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 이젠 더 이상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원받고 단순히 그 일을 수행해주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이런 방식으로는 민간의 자립과 자급, 자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요원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민간 스스로도 역량을 기르고 자원을 모아 더 이상 보조금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업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민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필요기반의 지역개발 정책이 아니라 자산기반의 지역개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요기반의 정책이란 그때마다의 주민의 필요에 대응하여 전문가나 관료들이 '위에서' 결정하여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자산기반의 지역개발 정책이란 지역사회가 현재 가진 장점/강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지역사회에 의한(by the community), 지역사회를 위한(for the community)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공동선에 눈뜰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간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 공동생산자이라는 관점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민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이 많아지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일에 예산만 쏟아 부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